정부 투자활성화 … 수도권 '훈풍' 지방은 '삭풍'

전발연 분석, 7차 대책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집중
전남도 추진 시내면세점·복합 리조트 등 위축 우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수혜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몰려 있어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프로젝트와 핵심관광인프라 구축, 혁신기업 입지 확대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인구 및 산업 인프라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22일 전남발전연구원은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대상 지역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전남이 그동안 추진한 시내면세점, 복합리조트, 관광호텔, 항공정비산업(MRO)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기업 입지 확대 대안을 제시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각각 3개소, 1개소를 추가 설립할 경우 기존 수도권 7개소, 영남권 5개소, 충청권 2개소, 제주권 2개소 등 20개소에 달하는데도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은 1개소도 없는 실정이다. 전발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거점도시인 여수, 목포나 섬지역 내 면세점을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규 복합리조트 관련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인천 영종도 2개소, 제주 1개소 이외에 올해 복합리조트 2개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내 카지노 등 관광시설 투자유치에 타격이 예상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내에 융합형 복합리조트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및 공원해양휴양지구 도입,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등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는 서남해 연안 및 도서 관광개발, 보호구역 내 주민 불편 및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해안경관의 활용 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고 싶은 섬' 등 전남도 브랜드 시책, 해안 특성을 감안한 해안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개선 등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발연의 입장이다.

순천시 등이 포함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와 연계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분원 등 국책 R&D 기관 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한 국제교육 기반구축과 외국인 정주인구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안국제공항에 소형항공사 MRO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사 설립 시 국가 차원의 MRO지원제도 신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현재 분양 및 건립허가가 진행중인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에 항만정보시스템, 기업비즈니스 지원, 전시·박람회산업(MICE) 등 물류서비스 특화 및 물류서비스 전용용지 지정 등이 사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여수산단 방문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겨울철 도로제설 자재인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는 (주)와이씨씨 여천화학을 방문, 주순걸 대표(가운데)와 김재곤 광주·전남본부장(오른쪽)의 안내로 제품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주)와이씨씨 여천화학에서는 친환경액상제설제를 하루 500톤씩 생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11곳
1295명 채용 416명 지역 배치

전남도,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정착한 공공기관 11곳이 모두 1295명을 채용해 이 가운데 416명을 빛가람혁신도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계획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 및 권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청년층의 역외유출, 취업난 및 구인난의 동시 발생 등을 해소하면서 오는 2018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11개 기관에서 모두 1295명을 채용하며 이 중 평균 32%인 416명을 빛가람혁신도시에 배치한다. 이전 기관별 총 채용인원과 지역 할당은 한전의 경우 800명 중 25%인 200명, 한전KDN이 40명 중 25%인 13명, 한전KPS가 200명의 25%인 50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0명), 한국전력거래소(15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사급 10명), 한국콘텐츠진흥원(10명)은 채용인원 전체를 혁신도시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25명의 25%인 30명,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명의 90%인 27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5명의 90%인 23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0명의 80%인 8명을 본사에 두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전 공공기관 인력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간담회'에서 전남도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분을 포함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전남에서 청년 6749명이 역외 유출되는 한편 6000여명의 청년 일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15~3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29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1만3400개, 빈 일자리 채우기 24개 사업으로 2570개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력 등은 연 2차례 지역대학을 돌며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들이 얼마나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FISU, U대회 육상트랙 지역업체 선정에 꼬투리

이탈리아 몬도사 추천 요구
광주시 "과도한 개입" 불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에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 트랙 시공 업체를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계 특정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다.

U대회의 시공규정에 따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인증을 획득한 국내 제품을 선정한 광주시는 "국제 관례를 무시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22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FISU측 육상기술위원은 지난 13일 광주U대회조직위에 전자우편을 통해 "이전 U대회 개최도시인 카잔의 성공적인 경험에 따라 육상 트랙 바닥재의 개선과 장비 공급자로 이탈리아 업체인 몬도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FISU 기술위원은 특히 "모든 경기장은 전반적으로 감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육상경기장이 언제쯤 준비가 완료되는지 회신해 달라"며 감사·승인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광주시를 압박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미 지난해 12월 함평 소재 플러버와 육상트랙 자재 2만8431㎡를 24억6800만원에 제3자 조달입찰방식으로 계약한 상황에서 FISU측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업체인 플러버는 재활용 고무분말 대신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섞은 최상의 제품을 생산해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품 인증까지 받고 해외 진출을 준비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육상트랙 시공을 놓고 광주U대회 조직위측이 몬도사와 스포츠 용품 협찬을 대가로 자체 협상을 벌였던 만큼 'FISU-광주 U대회 조직위-몬도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전남도·22개 시군 올 2조7000억 사업 발주

법성~홍농 확포장 863억 등
80% 상반기 조기 시행키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올해 2조7000억원의 사업을 발주한다. 전남도 자체 발주사업은 868건에 4678억원, 22개 시·군은 1만823건에 2조2726억원이다.

22일 전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모두 1만1691건, 2조7404억원 규모다. 전남도가 자체 발주할 사업은 공사 511건(3726억원), 용역 189건(614억원), 물품 168건(337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863억원 등 도로공사 172건(1663억원),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 289억원 포함 항만사업 40건(599억원), 봉학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168억원 등 하천사업 48건(694억원), 사방사업 227건(42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하는 사업의 80.2%인 772건(375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업의 82.8%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물품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공사 및 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계약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1000만원 이상 주요 자재는 지역 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걸 전남도 회계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中 300명 말레이 경유 IS 가담"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

최근 3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중동지역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내무장관은 베르나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안부의 고위 관리가 이 같은 사실을 전해줬다고 공개했다. 아흐마드 장관은 양국이 테러세력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지만 중국인들이 이처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IS에 가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과 동남아 주변국 테러세력 간에 협력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흐마드 장관은 그러나 이들 중국인이 말레이시아를 경유, 시리아와 이라크의 IS에 합류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는 화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선을 웃돌고 있으며 현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최근 자국민 일부가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 등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 등지로 향한 것으로 드러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IS의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은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